

홍수 피해주민 7733명에 1인당 최대 11억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주민 배상 조정결정 홍수 조정 첫 사례...신청인·배상신청금액 최대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총 1500억원 가까이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 당국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이며, 신청인과 배상 금액 모두 조정 결정 사상 가장 큰 규모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해당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게 배상금 1483억57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2020년 8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중부지방 기준) 이어진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피해 주민들과 피신청인측은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과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해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이번 사건은 개정법에 따라 심리한 첫 조정 사건이다.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3월16일까지 피해 주민 8430명이 신청한 배상금은 3763억5600만원이다.

중조위는 조정 신청 후 5개월여간 심리를 거쳐 피해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원인 조사에서 피신청인측의 댐·하천 관리 미흡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역대급 장마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점, 그간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부담 비율을 삼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산정했다.

배상금은 정부(환경부) 약 852억원(57%), 수자원공사 370억원(25%),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원(18%)을 각각 분담해 지급한다.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상됐던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은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지 일부가 하천이나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발생 피해의 50%



만 인정했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상이 결정된 7733명 중 99.2%인 7671명은 조만간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인당 최고 배상 금액은 돈사 피해로 인한 11억726만9000원이다. 최저 금액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1만7100원이다.

그러나 당초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 등으로 조정종결된 697명, 조정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62명은 소송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 수위 변화로 발생한 홍수에 대해 분쟁을 다룬 첫 사례다. 조정

신청인 수와 배상 금액은 중조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조정 신청 후 법정 시한인 9개월보다 더 빠른 5개월여 만에 처리되면서 결정까지 시간이 상당히 단축됐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남진기자



미세먼지 사망자 소폭 감소...오존 피해는 늘어

65세 이상·남성 피해 커

최근 5년간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로 사망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존 농도 상승으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 마련을 통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다. 제1차 평가는 기온과 대기질, 감염병 등 3개 영역, 31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3 $\mu\text{g}/\text{m}^3$ 에서 2019년 22.4 $\mu\text{g}/\text{m}^3$ 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단기노출 사망자는 2015년 2087명에서 2019년 2275명으로 증가했으나 장기노출 사망자는 같은 기간 2만4276명에서 2만305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오존 연 평균 농도는 2010년 35.8ppb에서 2019년 45.0ppb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오존 농도 상승에 따른 초과 사망자 수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폭염과 한파의 경우 2018년이 각각 절정이었다.

2018년엔 전국 평균 폭염 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고 한파 일수 역시 12일로 최다였다.

폭염의 경우 2011~2020년 연 평균 1176.9명의 초과 응급실 방문자를 유발했고 1076.9명이 입원을 했다. 한파의 영향을 보면 2014~2019년 282.3명이 심한 추위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또 대기질과 폭염, 한파로 인한 초과 사망자는 65세 이상과 남성에서 더 많이 추산됐다.

감염병의 경우 장감염질환 입원환자가 2010년 6.1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증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취약계층 건강 영향 등 심층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범사회적 과제인 만큼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기후 보건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경찰 사칭' 노점상 상습 절도 50대 남 검찰 송치

노점상을 다니며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절도 및 공무원자격을 사칭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광진구 중곡동의 한 노점상 주인에게 면세 담배 단속을 나온 경찰관이라 본인을 소개하며 가게 안으로 침입해 현금 60여만원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복 수사 6일만인 지난 10일 천호역 역사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의정부 등의 노점상을 다니며 현금 45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비기자

'특산품 허위 판매 행위'...농관원전남 집중 점검 실시

전남지원,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

'해남 고구마' '무안 양파' 등 전남지역 유명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통신판매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점 관리 품목은 '해남 고구마·월동 배추' '무안 양파' '영광 모싯잎송편' '진도 대과' '나주 배' 등 35개 품목이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166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농관원 전남지원 7개 사이버

전담반(25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복 적발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